

## 민주당은 국민행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협조하라!

우리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임 약지25는 민주당의 일방적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10월 10일 무상보육 시작으로 11일 부자감세 철회, 그리고 13일 오늘은 창조경제의 실체논란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10월 8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폄하하는 민주당의 근시안적 정책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창조경제의 실체가 없다고 비난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는 벤처육성 등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제시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에서조차 창조가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시각이라면 과거 김대중 정부의 '제2전국운동', '신지식인 정책' 과 노무현 정부의 '혁신전략' 등도 실체가 있었다고 과연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기반의 창조경제」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장, 고용, 복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융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창조경제 생태

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련법 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고싶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 추진 과제를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 활력 창출’, ‘SW·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 ‘미래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 육성전략의 경우,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융자중심의 자금 지원,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 창업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벤처 버블을 야기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투자 중심의 자금지원,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 생태계 완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출범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창조경제 성과가 없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국민행복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3. 10. 13.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임 약지25